

2022~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

2022. 8.

기 획 재 정 부

순 서

I 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	1
II . 2022~2026년 경제여건 및 전망	2
III . 2022~2026년 재정운용 방향	6
IV .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	10
V . 재정혁신 추진방향	14
[참 고]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	23

I 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

-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 -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·보완
 - '04년 최초 수립('04~'08년 계획) 이후 '07년부터 국회에 제출
-
-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
 -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,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단 및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

<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>
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(기획재정부 → 각 부처, '21.12월)
 - *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('22.1월말)
-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,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·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('22.1월~)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단 구성·운영 ('22.5월~)
-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('22.7.7)
- 분야별·지역별 예산협의회의 개최 ('22.6~8월)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('22.8.3)
- 재정정책자문회의 통해 관계부처·지자체·전문가 의견수렴 ('22.8월)
-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('22.9.2)

II. 2022~2026년 경제여건 및 전망

1 대내외 경제 여건

세계경제

- (2022년) 高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가운데, 성장세 둔화 우려
 -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,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 지속
 - * 주요국 물가상승률(%) : (OECD<6월>) 10.3 (美<7월>) 8.5 (유로존<7월>) 8.9
 -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인상, 중국 봉쇄조치, 글로벌 공급차질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 확산
 - * (美) 2분기(1/4~2/4) 연속 전기대비 (-)성장 / (中) 전년동기비 0.4%<'20.1/4분기 이후 최저>
- (2023년 이후)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, 성장 관련 불확실성 지속 전망
 - '23년의 경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, 주요국 금리인상 파급영향 등으로 내수 둔화 우려
 - 중장기적으로는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성장세 회복 전망
 - 다만, 미·중 갈등, 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 및 분업구조 약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세계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(%)

		'22	'23	'24	'25	'26	'27
세계 성장률		3.2	2.9	3.4	3.4	3.3	3.3
- 선진국	성장	2.5	1.4	1.7	1.7	1.6	1.6
	물가	6.6	3.3	2.0	1.8	1.8	1.9
- 신흥국	성장	3.6	3.9	4.6	4.5	4.4	4.3
	물가	9.5	7.4	5.0	4.5	4.2	4.1

* 출처 : World Economic Outlook(IMF, '22~'23년은 7월 전망, '24년 이후는 4월 전망 기준)

국내경제

□ (2022년) 해외發 물가상승 압력 속에서 경기 불확실성 확대

- 국제원자재·곡물가격 상승 등 해외發 요인이 국내물가로 전이·확산되면서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

* 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) : ('22.1) 3.6 (2) 3.7 (3) 4.1 (4) 4.8 (5) 5.4 (6) 6.0 (7) 6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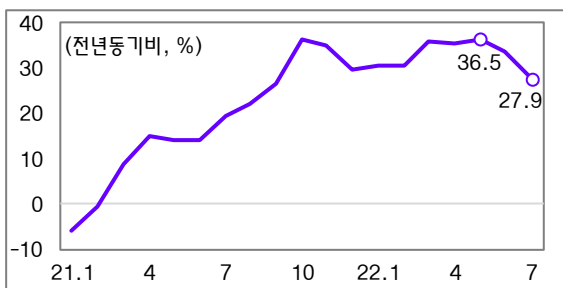
- 성장은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, 민간소비 중심의 회복세 유지

* 카드매출(전년동월비, %) : ('22.1) 17.5 (2) 7.6 (3) 7.3 (4) 13.8 (5) 16.4 (6) 12.5 (7) 15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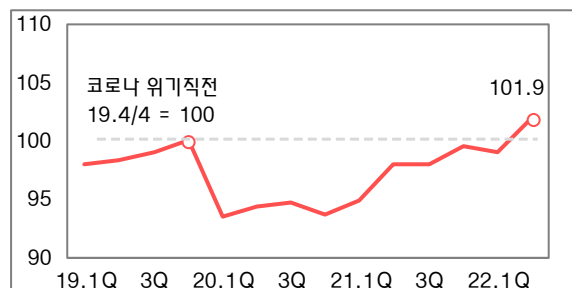
* GDP 성장률(전기비, %) : ('21.1/4) 1.7 (2/4) 0.8 (3/4) 0.2 (4/4) 1.3 ('22.1/4) 0.6 (2/4) 0.7

- 다만, 글로벌 경기둔화, 금리인상 영향 등이 하반기 이후 수출·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

수입물가 상승률



민간소비(SA) 추이



□ (2023년 이후) 해외發 물가 상승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,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전망

- '23년의 경우에도 세계경제 성장 위축, 국내 금리인상 영향 등이 경기 회복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 예상

* IMF '22→'23년 성장전망(%,'22.7월) : (세계) 3.2→2.9 (美) 2.3→1.0 (유로존) 2.6→1.2

-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 등은 긍정적 요인

- 다만,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, 대내적으로 민간활력 복원과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·성장잠재력 제고 필요

재정수입

- (국세수입)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으나, 중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함께 국세수입 증가 예상
 - '21~'22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나 '23년에는 기저효과·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증가율 둔화
 - '24년 이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종료 등으로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 예상
- (국세외수입) 기금 수입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, 다각적인 수입 확충 노력 등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
 - 세외수입은 일시적인 하방요인이 있으나 추후 증가 전망
 - 글로벌 금리상승 등에 따라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감소 및 정부 수납분 축소 전망
 - 법정부담금 증가, 정부배당 확대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중장기 증가 전환 전망
 - 기금수입은 現 상승 추세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
 - 국민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가입자 확대, 임금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

재정지출

- 코로나로 인한 한시지출 감소 요인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, 잠재성장률 재도약을 위한 투자 등 지출증가 요인 상존
 - 코로나 확산세 안정화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, 백신구입·진단검사비 등 코로나 한시지출은 감소 전망
 - 저출산·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, 잠재성장률 저하 대응을 위한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 지출증가 요인 심화
- ⇒ 건전 재정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지출관리 강화 필요
- 행복사회 구현, 민간중심 역동경제,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지출소요도 증가 전망
 - ① (행복사회 구현) 코로나19, 고물가·고금리 등으로 피해가 확대된 취약계층 보호와 양극화 해소 지원 확대
 - ② (민간중심 역동경제) 민간중심 경제운용 전환을 통한 저성장 극복과 미래산업 육성·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뒷받침
 - ③ (글로벌 중추국가)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증진,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지출, 국민 안전 보호 투자도 확대

'21~'25년 계획 대비 '22~'26년 부처요구

(단위 : 조원, %)	'21	'22	'23	'24	'25	'26	증가율
▪ '21~'25년 계획(A)	558.0	604.4	634.7	663.2	691.1	-	5.5
▪ '22~'26년 부처요구(B)*	-	-	638.6	731.3	773.2	808.1	8.2
▪ 계획대비 추가요구(B-A)	-	-	4.0	68.1	82.1	-	-

*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 ('22.1월말)

* '22년은 본예산 확정, '22~'26 증가율은 '23~'26년 기준

Ⅲ. 2022~2026년 재정운용 방향

1 재정운용 기본방향

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확립

-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속도 안정화
- 지출 절감, 총수입 확충 등을 통해 매년 100조원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

② 우리 경제·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은 적극 수행

-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서민·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생지원에 만전
- 저출산·고령화, 생산성·성장잠재력 하락 등 우리 경제·사회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지속

③ 근본적인 재정제도 개혁,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뒷받침

- 재정준칙 법제화,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에 정책역량 총집중
-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, 보조사업 정비, 엄격한 공무원 정원·보수 관리 등 역대 최고 수준 재정지출 구조조정 병행
- 민간투자 활성화,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, 공공기관 자산 정비 등 다양한 재정관리 수단도 적극 활용

재정수입

□ 재정수입(총수입)은 '22~'26년 기간 중 연평균 6.6% 증가할 전망

○ 국세수입은 '22~'26년 기간 중 연평균 7.6% 증가할 전망

- 경기회복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한 '21~'22년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나,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세 유지 예상

○ 세외수입은 '22~'26년 기간 중 연평균 1.9% 수준 증가할 전망

○ 기금수입은 '22~'26년 기간 중 연평균 5.4% 수준 증가할 전망

< 중기 재정수입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2년*		'23년	'24년	'25년	'26년	연평균 증가율
	본예산	추경**					
■ 재정수입	553.6	609.1	625.9	655.7	685.6	715.2	6.6
○ 국세수입	343.4	396.6	400.5	418.8	439.2	459.9	7.6
○ 세외수입	26.1	28.3	25.2	26.9	27.7	28.1	1.9
○ 기금수입	184.1	184.1	200.3	210.1	218.7	227.2	5.4

* 국회 확정예산 기준 / ** 2차 추경 기준

□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세수증가로 '21~'22년 큰 폭 상승한 이후 '23년에 소폭 감소하나, 이후 완만한 상승 예상

<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>

(단위 : %)

	'22년*	'23년	'24년	'25년	'26년
■ 조세부담률	23.3	22.6	22.7	22.8	22.9
■ 국민부담률	31.1	30.7	30.8	31.0	31.3

* 2차 추경 기준

재정지출

- 재정지출(총지출)은 '22~'26년 기간 중 연평균 4.6% 수준으로 관리
 -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급격히 확대된 국가채무 등 고려,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을 엄격 관리하여 건전재정 확립
 - '22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여 관리하되,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필수 소요를 최대한 반영
- 의무지출은 '22~'26년 기간 중 연평균 7.5% 증가
 - 고령화·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필수소요 확대와 함께 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 추진
- 재량지출은 '22~'26년 기간 중 연평균 1.5% 증가
 - 코로나19 백신도입,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용자 등 확대된 한시소요는 축소·폐지하고, 실소요 점검·투자중점 전환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소요는 과감히 축소
 - 절감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·미래대비·중추국가 도약 등에 재투자

< 중기 재정지출 계획 >

(단위 : 조원, %)

	'22년*		'23년	'24년	'25년	'26년	연평균 증가율
	본예산	추경**					
■ 재정지출	607.7	679.5	639.0	669.7	699.2	728.6	4.6
(증가율)	8.9	21.8	5.2	4.8	4.4	4.2	
○ 의무지출	303.2	329.7	341.8	361.8	382.5	405.1	7.5
(비중)	49.9	48.5	53.5	54.0	54.7	55.6	
○ 재량지출	304.5	349.8	297.3	308.0	316.8	323.6	1.5
(비중)	50.1	51.5	46.5	46.0	45.3	44.4	

* 국회 확정예산 기준 / ** 2차 추경 기준

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
□ (재정수지) 세수여건 개선과 함께 지출 증가속도 억제 등을 통해 '23년 이후 재정수지가 대폭 개선되도록 관리

○ 관리재정수지를 '22년 △5%대(2차 추정)에서 '23~'26년 △2%대 중반으로 적자폭 대폭 개선

- '21~'25년 관리 계획보다 적자폭 2.2%p 수준 개선('23~'25년 평균)

※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*는 '22년 △3%대(2차 추정)에서 '23~'26년 △0%대 중반으로 관리

* 통합재정수지 = 관리재정수지 + 사회보장성기금 수지

□ (국가채무) '26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은 50%대 중반 이내 관리

○ '25년 국가채무비율 기준 '21~'25년 계획에 비해 7.4%p 축소

<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2년*		'23년	'24년	'25년	'26년
	본예산	추경**				
▣ 관리재정수지	△94.1	△110.8	△58.2	△58.6	△57.4	△56.6
(GDP대비, %)	(△4.4)	(△5.1)	(△2.6)	(△2.5)	(△2.3)	(△2.2)
※ 통합재정수지	△54.1	△70.4	△13.1	△14.0	△13.7	△13.4
(GDP대비, %)	(△2.5)	(△3.3)	(△0.6)	(△0.6)	(△0.6)	(△0.5)
▣ 국가채무	1,064.4	1,068.8	1,134.8	1,201.2	1,271.9	1,343.9
(GDP대비, %)	(50.0)	(49.7)	(49.8)	(50.6)	(51.4)	(52.2)

* 국회 확정예산 기준 / ** 2차 추정 기준

IV.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< 기본 방향 >

- ◇ 경제·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확대하고, 분야·부문간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탄력적 재정운용 추진
- ◇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재정의 핵심 역할 수행
 - ① (사회) 지역·계층·세대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 및 고령화·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
 - ② (경제) 경제운용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, 미래전략산업 육성, 초격차 기술개발, 중기·벤처 경쟁력 강화 등 역동경제 실현
 - ③ (행정) 전략적 ODA 활용, 튼튼한 안보역량 구축, 국민 안심 사회 실현, 유능한 정부 구현 등 행정역량 제고

1. [사회분야]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

- (보건·복지)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,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 소득·고용·주거 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·취약계층 보호 확대
 - 장애인, 노인, 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돌봄·소득·생활·의료 등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강화
 - 감염병 예방·관리를 촘촘히 지원하고,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·치료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도 차질없이 확충
- (일자리) 직접 일자리, 고용 장려금 등 정부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, 직업훈련,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에 집중
 - 신산업분야 인력확충, 맞춤형 훈련 신설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고, 기업 고용창출, 구직자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
 -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, 저소득·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 고용 안전망도 지속 강화

- (교육)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종합 지원하고, 교육 급여·장애인교육 지원 확대 등 교육격차 및 교육비 부담 완화
 -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「^(가칭)고등·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」 신설 추진
- (문화·체육·관광) 코로나19 한시 긴급지원 소요는 축소하고, K-콘텐츠 지원, OTT 중심 인력양성 등 공정한 문화 향유 확대
 - 취약계층의 전문·생활 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, 관광자원의 고품질화 및 디지털화 등 지원 확대
- (환경) 경제·산업 부문 저탄소화를 뒷받침하여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고, 과학적·실용적 NDC 달성을 위해 수송·폐기물 등 지원
 -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홍수·가뭄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, 노후화된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

2. **[경제분야]** 자율과 창의 중심의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실현

- (산업·중기·에너지)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한시 확대 소요는 축소하고,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
 - 핵심자원 비축·도입선 다변화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 구축 지원
 - 민간주도 벤처창업·스케일업 및 중소기업 기술기반 혁신 지원, 소상공인의 온라인·스마트화 등 경쟁력·자생력 강화 지원
- (SOC) 지역간 핵심 교통 인프라,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 중점
 - 스마트시티, 노후산단 개발 등 지역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거점 지원, 자율주행차·UAM 등 지능형 모빌리티 혁신

- (농림·수산·식품) 주요 식량작물 등 식량안보 확보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 위한 수급관리 강화,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
 - 청년 농어업인 육성, 스마트 농어업 확산, 농식품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지원
- (R&D) 반도체·우주분야 등 초격차 전략산업,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, 저탄소생태계 구축 등 R&D 적극 투자
 - 기존 출연 중심의 R&D 지원방식에서 나아가, 민간투자 연계형 R&D를 확대하고,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등 기반 조성도 강화

3. **[행정분야]** 국민보호 및 국제사회 연대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

- (외교·통일) 전략적 ODA, 경제안보 등 능동적 외교 추진을 통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, 대북 민생협력지원 확대
 -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사건사고 대응력을 제고 하고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 구축을 통한 편의 증진
- (국방) 전방위 위협 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핵심전력 보강,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등 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
 - 병 봉급 인상, 의식주 개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도 병행
- (일반·지방행정)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낙후·소외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고, 청년세대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도 확대
 - 민관협력 기반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, 데이터 개방·활용 촉진, 정책결정 과학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뒷받침
- (공공질서·안전) 강력·신종범죄에 대응한 공정한 법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
 - 기후변화로 장기화·대형화하는 재해 대비 예방투자 확대, ICT 기술 활용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

< 2022~2026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>

(단위 : 조원, %)

구분	'22	'23	'24	'25	'26	'22~'26 연평균
총 지출	607.7 (8.9)	639.0 (5.2)	669.7 (4.8)	699.2 (4.4)	728.6 (4.2)	(4.6)
1. 보건·복지·고용	217.7 (9.0)	226.6 (4.1)	238.6 (5.3)	254.4 (6.6)	269.5 (6.0)	5.5
2. 교육	84.2 (18.2)	96.1 (14.2)	100.3 (4.4)	101.7 (1.4)	105.9 (4.1)	5.9
3. 문화·체육·관광	9.1 (7.3)	8.5 (△6.5)	8.7 (2.7)	8.9 (1.9)	9.1 (1.8)	△0.1
4. 환경	11.9 (12.4)	12.4 (3.9)	12.9 (4.0)	13.3 (2.8)	13.5 (2.0)	3.2
5. R&D	29.8 (8.7)	30.7 (3.0)	32.0 (4.4)	33.2 (3.6)	34.4 (3.6)	3.7
6. 산업·중소기업 · 에너지	31.3 (9.3)	25.7 (△18.0)	26.6 (3.5)	27.4 (3.0)	28.1 (2.6)	△2.6
7. SOC	28.0 (5.5)	25.1 (△10.2)	25.5 (1.5)	25.8 (1.1)	26.0 (1.0)	△1.8
8. 농림·수산·식품	23.7 (4.5)	24.2 (2.4)	24.5 (1.0)	24.7 (1.0)	24.9 (0.9)	1.3
9. 국방	54.6 (3.4)	57.1 (4.6)	59.5 (4.2)	61.8 (3.8)	63.8 (3.4)	4.0
10. 외교·통일	6.0 (4.4)	6.4 (7.3)	6.7 (5.4)	7.0 (3.5)	7.2 (2.8)	4.7
11. 공공질서·안전	22.3 (0.1)	22.9 (2.4)	23.8 (4.0)	24.7 (3.9)	25.6 (3.8)	3.5
12. 일반·지방행정	98.1 (15.8)	111.7 (13.9)	120.3 (7.6)	126.5 (5.2)	132.2 (4.5)	7.7

V. 재정혁신 추진방향

1 재정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

재정준칙 법제화

-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재정준칙 재설계 및 법제화
 -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지표를 기준으로, 채무증가 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준칙 마련
 - 관리재정수지 $\Delta 3\%$ 를 한도로 두되, 국가채무비율이 60% 초과시에는 수지한도가 $\Delta 2\%$ 로 축소되도록 설계
 - 위기대응 등 재정의 역할이 담보될 수 있도록 예외사유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되, 예외사유 소멸 후에는 건전화대책 수립 의무화

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

-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민부담*의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 수입·지출 부문의 선제적 제도개혁 방안 마련
 - * 국민부담률(%) : ('17) 25.4 → ('20) 27.9
 -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
 - 연금개혁특위와 연계하여 공적연금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 논의
 - 건강보험·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향후 지출소요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하고, 의료비 등 지출 적정화 방안을 강구

중장기 재정운용전략 수립·추진

- 중장기 시계에서 우리 경제·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「재정비전 2050」 수립·추진
 - 장기재정전망 2070을 기반으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재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전략 수립
 - 2050년까지의 장기 시계에서 과감한 재정개혁과제 발굴·추진

2 **성역없는 지출 효율화**

지출효율화

-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, 경제운용 방향 뒷받침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'23년은 역대 최대 규모 지출 재구조화 추진
 - 일자리, 정책금융 등 정부 중심 재정사업은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고 불요불급 예산 삭감
 - 사업별 당초계획 대비 실제 소요 점검, 투자중점 전환, 지원 방식 개편 등을 통한 사업 원점검토 및 지출 효율화도 병행
 - 코로나19로 한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, 코로나19 백신 도입 비용 등은 과감히 축소·종료하고 소상공인 재기 등에 재투자
 - 위원회 등 정부조직 정비, 경상경비 절감, 공공기관 자체수입 발굴 등 공공부문 고통분담도 강화

- '24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·경제·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재정구조 개편도 병행
- 의무지출 절감 등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 추진으로 경직적 재정운용 구조를 개편하고, 절감 재원은 핵심소요에 재투자

관행적 민간보조금 재정비

- 협회·기관 등에 지원되는 경상적 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의 비효율성 완화
- 보조사업 연장평가 미흡사업, 집행부진 및 행사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 지속
- 신규사업은 사전 적격성 검토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, 기존사업은 보조사업 전달체계 단축 등 집행체계 내실화

기금 정비

- 기금 존치평가*를 활용하여 설치목적, 유사중복, 재원안정성 등을 재검토하고, 유지, 통폐합, 사업정비 등 추진
- * 기금존치평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68개 기금을 평가
- 사회·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금 설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, 달성 가능성이 없는 기금은 폐지
- 기금 재원이 동일하거나 일반회계 및 타 기금과 유사한 기능·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통폐합
-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거나 재원과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한 기금은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사업의 타 회계·기금 이관

교육재정교부금 개편

- 학령인구 감소, 미래인재 양성 투자소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* 제도 개편 추진

* 현재 내국세의 20.79%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, 유·초·중등교육에만 투자

-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* 등을 활용하여 「(가칭)고등·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」를 신설**, 미래 인재육성***에 투자

* 유특회계 전출금 제외, '23년 정부안 3.0조원

**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,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

*** ①대학 교육·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, ②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

③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, ④지방대학 육성 등

-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국세 연동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추진

예타제도 개편

-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'재정의 문지기'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·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·유연하게 제도 운영

-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

-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 및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예타절차 도입 추진

- SOC 및 R&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,000억원(국비 300→500억원)으로 상향 조정

국가계약제도 선진화

- 기술경쟁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, 안전·ESG 등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계약제도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
 - 기술경쟁 촉진을 위해 계약제도를 개편하고, 혁신·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* 활성화
 - * 現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계약제도 시범운영 → 성과평가 통해 정규 제도화
 -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제도를 정비하고 계약관련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 촉진
 - 불법하도급 관련 공공입찰 제한을 확대하고 안전 및 ESG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강화

4 수입기반 확충 및 재원조달 다변화

세입기반 확충

- 비과세·감면 제도 정비,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지속
 - ①정책목적 달성, ②정책효과 미흡, ③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·폐지
 -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소득과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을 마련
 -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,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등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

- 세원이전을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고, 악의적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·인프라를 지속 개선
 -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 추진
 -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·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, 관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규정 신설 등 추진

민간투자 활성화

-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적극 활용하여 필수 기반시설을 적기 확보하고,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
 - 기존 도로·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산업·생활·노후 인프라 등으로 대상시설 다양화
 - 사업방식 다변화, 수익 패러다임 전환, 절차·비용부담 완화 등 사업자의 민자사업 참여유인 제고
 - 재정·민자 간 연계 강화, 민자 사업대상 사전확정, 주무관청 전문성 제고 등 관리체계 혁신 추진

국유재산 활용

- 유휴·저활용 국유재산의 정비 및 활용도 제고 추진
 - 향후 5년간 16조원+a 규모 유휴·저활용 국유재산 정비 추진
 -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 중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(상업용 건물, 농지, 비축토지 등) 매각 검토

- 청·관사 등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희·저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용도폐지 등 정비 추진
-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* 및 소상공인·청년창업 지원** 등 국가정책 뒷받침
 - * 유희 국유지 개발 및 건축복합개발(청사+청년임대주택)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
 - ** 유희 공공청사에 청년창업허브 조성(주변시세 대비 30% 저렴한 창업공간 임대)

공공기관 자산 정비

-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정비를 추진하고,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
-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,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, 유희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추진
 - * 콘도 회원권, 골프 회원권, 유희 부지 및 설비 등
- 고유·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, 출자회사 지분 정비 추진
 - * 정비대상 제외 : ①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, ②자회사(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)
- 공공기관 청사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 시설별 기준면적 등을 초과하는 경우 축소하고 유희면적은 매각·임대 등 추진
 - * 1인당 업무면적(56.53m²), 기관장 사무실(99m²), 임원 사무실(50m²)
-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

재정사업 성과관리 고도화

- 성과 기반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표준화, 평가 결과의 예산환류 강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고도화 추진
 - 부처별 주요업무와 관련높은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·공개하고, 과도한 성과지표 수를 절반 이하로 감축*하여 핵심지표 위주 관리
 - * 성과지표수: (현행) 1,000여개(프로그램당 2~3개) → (개선) 500개 이하(프로그램당 1개)
 - 다양한 사업성과 평가제도(6개 부처, 11개 평가)의 시기·방식을 표준화하고, 미흡사업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강화
 - 국정과제 등 새정부 핵심 재정사업(群)을 선정하여, 재정당국 중심으로 쏠주기(편성·집행·평가) 관리

국가결산체계 개편

- 국가결산의 유용성을 높이고, 결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「국가결산보고서*」 개편 추진
 - *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, 세입세출결산, 재무결산, 성과보고서로 구성
 - 발생주의 도입 10년을 거치면서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무제표 개편
 - 재정상태표, 재정운영표, 주석 등은 재무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운영 결과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
 - 현금흐름표를 신규로 도입하여 국가 현금흐름을 운영, 투자,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
 - 결산 책임성·신뢰성 제고를 위해 재무결산에 대한 종합적 분석 정보 등 확대

재정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

- 중앙(dBrain⁺), 지방(e호조), 지방교육(e-에듀파인) 및 공공기관의 분산된 광범위한 재정정보를 통합·공유
 -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재정데이터 쉐어 주기(수집-가공-연계-개방-활용) 관리 및 이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

AI 기반 정책성과관리 체계화

- 다양한 정책지표(8천여개)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정책상황 통합 모니터링 기능 강화 추진
 - 핵심 지표의 수치 변동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정책위험 상황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 추진
 - 인구, 일자리, 지역민생, 대외변동성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시각화된 정책상황판 확대*

* 주요 정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강화

(1) 보건·복지·고용 분야

- 소득·고용·주거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
 -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, 재난적의료비·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안전망 보강
 - 생계·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*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 46→47%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보완('23. 1월~)
 - * 재산기준(서울기준): (기본재산공제) 69→99백만원, (주거재산한도) 120→172백만원
 - 두루누리 사업 지원요건 완화('23년)*를 통해 저임금 취약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, 구직기간 중 소득안정 지원 강화
 - * (소득기준) 최저임금 120→130% 이하, (사업장기준) 예술인특고 10인미만→소사업장 종사자
 - 쪽방·반지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를 지원하고,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가입비 및 피해자 긴급대출 신규 지원
- 장애인·노인·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
 - 장애인의 돌봄·소득·생활·의료 분야 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보완
 - 보호자가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돌봄(최대 7일)을 신규 지원하고 '15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수당 인상(月 4→6만원, '23년)
 - 노인층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인상(月 30.8→32.2만원, '23년)하고, 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인원 확대
 -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(月 30→40만원, '23년)하고,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보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설
 - 한부모·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기준 상향*('23년)
 - * (한부모) 중위 52→60% 이하, (청소년 한부모) 중위 60→65% 이하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 관리, 정신질환자 조기발견·치료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확충
 -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검진 확대 및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신규지원, 정신질환자·고위험군 전주기 지원 인프라 확충

【참 고】 일자리 분야 '22~'26년 재정투자 중점

-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훈련·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
 - 신산업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, 기업·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구직자·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
 -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하고, 고용장려금은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지원
- 민간이 주도하는 첨단산업분야의 현장 인력양성 강화
 - 기업·민간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첨단산업분야 현장인력 양성
 - 연령·업종 등 근로자의 특성 및 기업여건에 맞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, 국가기간산업 인력양성 지원 강화
- 기업의 고용창출,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
 - 고용복지+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
 - 기업·구직자 특성에 맞는 채용·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 -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및 재학 청년 대상 조기개입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
- 저소득·장애인·청년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 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지원 및 취업지원 효과 제고
 -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저임금 예술인·특고·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
 - 고령자·취약청년의 민간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맞춤형 고용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고,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강화

[2] 교육 분야

□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

- (유아) 안정적인 누리과정(3~5세 공통 교육·보육과정)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
- (초·중·고)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 지원하고, 소외계층 영재교육 확대, 실감형 SW·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
- (대학)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지원범위 확대,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시중보다 낮게 유지
 - 국립대학 승선실습 대학생의 급식단가 인상, 피복 지급품목 확대 등 복리후생 대폭 개선

□ 4차 산업혁명, 지방대학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인재양성 종합 지원

-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추가 15만명 양성을 위해 정원확대, 단기 교육과정 신설 등 지원
 - 특히,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원수준을 높이고, 교육·연구·실습 기반구축 예산도 지방대학 중심으로 중점 반영
- 디지털혁신공유대학,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사업도 지원 강화
-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핵심산업 산·학 협업 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지자체-대학 협력 지역혁신플랫폼 확대

□ 취약계층의 평생교육·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

-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대상·기간 확대
- 저소득층 등 평생학습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및 저소득 장애인 별도 지원
- 지적장애인 등 특수교육용 교과서 개발을 확대 지원하고, 장애인 직업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완공 지원

□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및 「^(가칭)고등·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」 신설 추진

[3]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- '문화 매력국가' 도약을 위한 K-콘텐츠 투자 확대
 - 영화·드라마·OTT 등 K-콘텐츠 제작지원을 강화하고, 문화 산업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지속 지원
 -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메타버스, 실감형 콘텐츠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
- 한류의 확장성·지속성 확보를 위해 연관산업 수출확대 및 전통문화·예술 등 콘텐츠 다변화 지원
 - 소비재·서비스 산업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을 위한 해외 홍보관 설치 및 연계행사·홍보마케팅 등 추진
 - 전통문화·예술·스포츠 등 우리문화 쏠 영역에서 다양한 한류 콘텐츠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
-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외·취약계층 및 지방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
 - 통합문화이용권,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지원대상·지원금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대상 예술활동·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
 -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순회공연 확대로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고, 문화취약지역 활력 촉진 및 문화도시 조성 지속 지원
- 관광시장 회복 및 관광산업 혁신지원
 - 관광시장의 재도약을 위하여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등 지역특화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한류 등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·육성
 -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확대 추진하고, '한국관광 데이터랩' 등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
- 생활체육 저변확산과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
 - 지정스포츠클럽 지원, 승강제리그 확대를 통해 풀뿌리 체육 활성화 및 생활스포츠 참여기회 확대
 -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산업 융자, 창업 기업 보육 등에 대한 지원 강화

[4] R&D 분야

-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주권 확립과 경제안보 확충을 위한 R&D 투자 확대
 - 반도체 등 시장 선점과 경제안보 및 공급망 확보에 필수적인 초격차 전략기술*의 연구개발, 인프라,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
 - * ❶반도체, ❷5G·6G·양자, ❸미래모빌리티, ❹우주, ❺첨단바이오, ❻이차전지, ❼인공지능
 -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해 산업공정 분야 탄소저감기술개발 및 상용화 생태계를 조성*하여 산업구조의 대전환 촉진 유도
 - * 대규모 예타 사업 추진 :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(산업부, '23~'30) 등
- 미래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6대 미래첨 분야* 도전적 연구 지원
 - * ❶핵융합 등 미래에너지, ❷난치병, ❸식량위기·사회재난 등 생활안전, ❹로봇·VR/AR 등 일상혁신, ❺UAM·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, ❻우주기초연구지원
 - 핵융합·난치병 등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시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투자 추진
 - *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 용융염원자로(MSR)원천기술개발 등 장기 프로젝트 신규 추진
-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 중심 양적 투자가 아닌 민간 역량을 활용한 성과 중심 R&D 투자 등 질적 구조조정 유도
 - TIPS, 민간투자연계형 R&D 등 민간과의 연계 확대,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시장 진출 등을 위한 기업 고성장 스케일업 확대
 -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·나뉘먹기식 R&D* 지원은 축소하고 경쟁형·다부처 협업형 R&D, 임무지향적 R&D 투자 확대
 - * 개인(생애기본연구 등 연구안전성보장), 중소기업에 소규모 분배형 R&D사업
-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기반 강화 추진
 - 반도체, 우주, 바이오 등 대학(원) 과정의 기술융합 및 고도화 연구지원 등을 통해 석·박사급 고급인재와 실무인재 확충

[5]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

- 핵심전략산업·제조업 집중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
 - 반도체·자동차·조선 등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-기술개발-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
 - 스마트 산단,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인프라 지속 지원
- 공급망 및 수출여건 개선을 통해 대외경제충격에 탄력적 대응
 - 수입선 다변화, 주력산업 국산화 R&D, 유턴·외투기업 지원, 공공비축 강화 등 대외 공급망충격 대응역량 강화
 - 플랫폼고도화·전문인력양성 등 디지털무역 인프라 강화
-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및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지원
 - 원전 기업역량강화, 맞춤형 수출지원, 기술개발, 인프라 투자 등 원전산업 생태계 재건 및 국제경쟁력 복원
 - 청정수소(그린·블루) 생산으로의 전환 추진, 상용차(버스 등)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 등 수소경제 순주기 지원
- 창업·중소기업 지원방향을 민간중심·혁신성장 관점으로 전환
 - 창업중심대학 확대, 민간투자 유치 창업·벤처기업에 R&D·사업화자금 및 글로벌·대기업 협업 등 민간중심 벤처·창업지원
 - 유망기업에 대한 혁신투자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도입을 통한 민간금융 활용 및 성장단계별·협업종류별 맞춤형 R&D지원 확대
-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재기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
 - 온라인 판로지원('27년 10만개), 스마트상점·공방('27년까지 7만개) 확대 등 소상공인 온라인·스마트화 지원
 - 유망소상공인 팀빌딩·사업화·투융자 종합지원 및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
 - 위기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,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 확대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

[6] SOC 분야

- (투자적정화) 그동안의 지출확대를 감안하여 적정화하되, 계속 사업의 차질없는 완공과 필수 신규사업 소요는 빠짐없이 반영
- (교통혁신) 권역간 이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망 확충 및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
 - (수도권 교통난 해소) GTX 기존 노선(A·B·C)의 차질없는 지원과 신규노선 확대 검토, BRT·광역버스 노선 확충
 - (지역 교통인프라) 신규 고속도로·국도 확충, 비수도권 광역 철도 등 지원으로 메가시티 1시간,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촉진
 - (저렴·안전한 대중교통) 알뜰카드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부담 경감 및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로 입석 방지
 - (교통약자 이동권)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·콜택시 확대 및 운영비 등 지원 강화
- (미래혁신 투자) 4차 산업혁명 시대 국토교통 분야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
 - (디지털국토) 고정밀 국토지도(1:1000) 제작 확대,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 추진
 - (모빌리티) UAM·PM(개인형 이동수단) 등 미래교통 투자 강화
- (안전투자)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 투자
 - (도로) 교량·터널 보수, 노후도로 포장정비 등 도로이용 안전 제고
 - (철도) 탈선 예방을 위한 선로개량 확대 및 첨단장비 투입,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 근로자 작업안전 제고
 - (수자원) 기후변화·집중호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제방정비 투자 대폭 확대

[7] 농림·수산·식품 분야

-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확보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
 - 자급률이 낮은 밀·콩 등 주요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, 글로벌 곡물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수입선 다변화 지원
 - 비축 및 재배면적 관리 등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능을 강화하고, 할인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 식재료 물가도 안정화
- 농·어업 직불금 확대 개편 및 농어업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
 -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,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및 소규모 어가·어선원 직불금 신설 등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
 - 가뭄·홍수 등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을 확충·보강하고, 재해대책비·재해보험 등 피해지원 지속
- 스마트 농어업 확산,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
 - 임대형 스마트팜 및 스마트 APC 확충,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신설 등 농축수산물 생산·유통·소비 전 과정의 스마트 전환 가속화
 - 청년의 농어촌 유입·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스마트팜 등 일자리·정착자금·거주공간 등을 종합 지원
-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민 복지 확충 등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
 - 고령 농어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농지연금 및 농어민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
 -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 생활권 확대, 민간 역량을 활용한 어촌신활력증진 신규 착수 추진

[8] 환경 분야

- 탄소중립을 新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삼는 녹색경제 전환 지원
 - (공정개선)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, 목표관리제 중소·중견 기업, 탄소 多배출업종 중소기업 등 맞춤형 공정혁신 지원
 - (녹색금융) 녹색채권, 탄소스프레드 대출 등 민간금융을 최대한 활용해 대규모 투자, 중소·벤처기업 등 기업규모별 금융공급
 - (R&D) 탄소저감 연계 공정설계 등 혁신기술개발 지원
- 과학적·실용적 NDC 달성을 위해 수송, 폐기물 등 부문 중점 투자
 - (수송) 전기차 및 수소 상용차(버스·트럭 등)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, 초급속 충전기 등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
 - (폐기물)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 10개소(누적) 확충, 통합 바이오가스화* 시설 확대 등 순환경제 전환 촉진
 - * 음식물쓰레기·분뇨·하수슬러지 등을 통합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
 - (국민생활) 다회용기, 전자영수증 등 친환경적 소비에 대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
-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홍수·가뭄 예방 투자를 확대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
 - (물환경)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
 - 특히 도심지 상습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설치 지원
 - (대기) 대기 정체 발생일 증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, 4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신규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추진
 - (국립공원) 노후화된 국립공원의 화장실, 주차장, 야영장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에코 리모델링 추진

[9] 국방 분야

-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첨단과학기술기반 국방전력 확충
 - 북 핵·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충을 위한 첨단무기체계 지속 보강
 - 미래전 대비, 우주·무인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무기체계 도입을 확대하고, 핵심·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 투자 강화
-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방위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
 - 수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, 수출연계 부품 국산화 등 방산 수출 지원 확대
 - 국방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발굴·지원 등 방산 중소기업 전략적 육성
- 국민 및 장병 눈높이에 맞는 복무여건 조성
 -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 및 사회진출 지원금을 '25년까지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
 - 수통·헬멧 등 개인전투장비 품질개선과 병 급식비 인상, 민간조리원 채용 및 더 좋은 병영식당 확대를 통한 장병 급식개선
 - 2~4인실 병영생활관 신축, 국민평형(32평형) 군관사 및 1인 가구형 간부숙소 확대 등 장병 주거지원 강화
- 부대운영·군수·의료 등 전방위에 걸친 스마트 국방 구현
 - 경계·군수·부대운영 등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부대·팩토리 구축 등 국방운영 첨단화
 - 원격진료 확대, 응급후송체계 강화, 국군외상센터 운영 등 군 특성에 부합하는 의료체계 구축

[10] 외교·통일 분야

-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ODA 확대 추진
 - 코로나 19, 기후변화,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인도적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해외긴급 구호 등 인도적 지원 증가
 - 글로벌 보건·백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 보건 기여 확대
 -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교섭을 위한 개도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, 태평양 연안국과의 협력 등 확대
 -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국제사회 내 위상제고를 위한 능동적 외교 지원 확대
 - 확산방지구상(PSI) 고위급 회의, 신안보포럼, 중소국가 대상 고위급 협력 추진 등 글로벌 이슈 선도적 역할 강화
 - 한국학기반확대 및 비대면 영사시스템* 구축,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통한 외교활동 인프라 확충
- * 실물여권만으로 재외공관 방문없이 비대면 영사 서비스 제공
-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
 - 북한 코로나 19 관련 지원 및 북한 인권 개선 위한 국제 협력 및 인권교육 등 대북 민생협력지원 확대
 - 북한 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인상 등을 통해 초기 지원 강화

[11] 공공질서·안전 분야

- 아동·여성·서민 등 사회적 약자 대상 **홍악·신종범죄**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,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강화
 - 스토킹, 보이스피싱,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자금추적·사이버수사 역량 강화
 - 홍악범죄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해 첨단기술 활용 전자감독제도 운영 및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관리 강화 지원
 - 아동·청소년 등 취약계층 범죄 피해자 상담·조사 및 진술 조력, 법률지원 등 보호 강화
- 교통사고 예방 및 치안유지 등 국민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
 -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, 범죄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·인프라 확충
 - 소방·경찰·해경 등 고위험 직업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개인 보호·안전장비 확충
-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, 예방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고, 민간의 사전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 추진
 - 풍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, 도심지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속
 -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 스스로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-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 대응·관리체계 구축
 - 전국 도심지 하상도로를 대상으로 침수우려시 출입을 자동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및 소하천 대상 자동수위·유량계측기 설치

[12]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□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

- 범정부 단순·반복업무 자동화(RPA), 지식행정 이용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으로 정부의 업무 생산성을 제고
-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디지털화 추진, 데이터 통합·분석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정부혁신 가속화

□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

-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본인기여에 정부가 매칭지원 해주는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
-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를 통해 부실(우려) 채권을 매입하여 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

□ 지방소멸대응,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원 등 지역사회 활력제고

-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(주거·통신 등) 구축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기금 운영(年 1조원)을 통해 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소멸에 대응
- 청년 공동체 활성화, 청년마을 조성 지원을 통해 청년문제와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,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기업과 민·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활력을 제고

□ 접경지역,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소외지역 지원을 통해 포용적 지역발전 추진 및 주소정보 고도화를 통한 혁신성장산업 지원

- 소외지역 생활여건 개선, 소득기반 확충으로 국가 균형발전 추진
- 주소체계 고도화, 주소지능정보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로봇·자율주행차·드론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

【별 첨】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

분야	지 표	'22년	'26년
보건·복지 · 고용	▪ 생계급여 수급자수(만명)	149	153+a
	▪ 기초연금 수급자수(만명)	628	784
	▪ 공보육 이용률(%)	38	56
	▪ 국민연금 수급자수(만명)	651	799
교육	▪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(개교, 누적)	-	24
	▪ 평생교육바우처(만명)	3.0	15
문화·체육 · 관광	▪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(조원)	140	171
	▪ 문화콘텐츠산업 수출규모(억달러)	122	148
	▪ 외래관광객 수(천명)	970	1750
	▪ 국민생활체육참여율(%)	60	65
R&D	▪ 초격차 기술 R&D 투자(조원)	3.7	5.0
	▪ 민간중심 R&D 투자(조원)	0.9	2.0
	▪ 혁신인재 양성(만명)	1.1	1.8

분야	지 표	'22년	'26년
산업 · 중소기업 · 에너지	스마트공장 수준 제고(고도화 1 이상)	7,335	9,427
	반도체 아카데미 인력양성(누적)	-	2,800
SOC	▪ 고속도로 연장(km)	4,929	5,566
	▪ 국가기본도(1:1000) 제작(전국토 대비)	11.5%	17.3%
	▪ UAM 상용화(단계)	준비 (인프라구축)	상용화 (25년~)
농림 · 수산 · 식품	▪ 농촌공간정비 생활권(누적 개소)	45	205
	▪ 수산물 수출 실적(억\$)	28.3	32.0
환경	▪ 무공해차 누적 보급	77만대	140만대
	▪ 폐기물 열분해율	약 1%	10%
국방	▪ 병장 기준 병 봉급 등 (만원) * 병 봉급 + 사회진출지원금	81.7	205.0
	▪ 첨단 국방기술개발 (건) * 우주 · AI · 사이버	244	600
외교 · 통일	▪ ODA 총 규모(조원)	3.94	5.74
공공질서 · 안전	▪ 교정시설 과밀수용률(%)	103.7	93.2
	▪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(개소, 누적)	55	135
일반 · 지방 행정	▪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자(만명)	0	4500
	▪ 청년 자립마을(개, 누적)	27	75